

# 국제경쟁력의 이데올로기성과 교육개혁의 방향

허 평 길

부산대 일반사회교육과 교수

사회 일각의 부정과 부패의 척결은 사정의 칼날로 일벌백계하고, 법집행을 성역없이 적용하고, 사정·감사와 시민의 감시를 열심히 하면 어느 정도 억제하는 효과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 전체가 상탁하부정으로 썩어 문드러졌을 때는 사정의 칼만으로 해결되지 않고 대개혁을 요하게 된다. 부정과 부패가 만연하는 원인은 법내용의 비현실성, 법집행의 불철저성과 비일관성, 법적용의 편파성, 그리고 사회적 가치체계의 혼란에서 오기 때문에 그 처방은 사정만으로 안 되는 것이다. 극단적 이기주의, 황금만능주의, 한탕주의, “이것도 부정이야?”주의 등은 체적으로 치유되는 성질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사회경제적 모순을 완화시킬 법체계의 정비와 정치질서의 정상화가 시급히 요청된다. 동시에 중장기적인 제도교육의 개혁과 단기적인 사회교육 그리고 사회 대혁신운동을 통해서만이 극복될 성질의 문제이다.

그래서 처음에 현 정권이 사학재단의 비리와 부정을 발본색원하고 향후 또다시 그런 일들이 저질러지지 않도록 교육법과 사립학교법의 대폭적인 개편으로 가닥을 잡아갈 것으로 기대했다. 또 지성을 포기한 대학의 교수들을 대학에서 추방하고, 부정을 저지른 사회지도층 인사들은 더 이상 사회지도층으로 행세하지 못하도록 엄단하는 줄로 알고 있었다. 학부모들이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방법을 교육개혁의 내용으로 담아 나갈 줄로 알았다. 학부모가 자식을 꼭 대학에 보내야만 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 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밝혀 처방을 해나갈 줄로 알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교육환경을 자유롭고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교육이 실현되도록 정부가 재정지원을 충분히 할 계획을 세워나가고, 교육부가 일선 교육현장의 교육을 더 이상 통제대상으로 삼지않고 진정한 교육이 있도록 자율성을 극대화 해주며, 교육에 필요한 것들을 요청하면 즉시 지원하는 체제를 교육부가 갖추어 나가는 사고의 일대전환이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 그리고 진정으로 교육개혁을 할 수 있는 교사를 존귀하게 대우해 줄 줄 알았다. 그런데 그것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어 가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현재 정부가 내세우는 정책지표는 ‘국제경쟁력의 제고’ 또는 ‘국가경쟁력의 강화’로 보인다. 결국 현 정

권의 교육정책 지표는 '국제경쟁력 있는 교육'이 될 것이다. 이 국제경쟁력의 제고라는 지표는 지금 각 대학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학 교육개혁의 지침이 되고 있다고 여겨진다. 이 기준에 맞도록 커리큘럼 개선, 연구소의 통·폐합과 연구비의 차등지급, 학과의 통·폐합이나 신·증설, 예산편성, 학사운영의 원칙수립, 인사의 원칙 등 광범한 개혁을 시도하고 있다고 보인다.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국제경쟁력 있는 교육' 또는 국제경쟁력이라는 기준이다.

첫째, 국제경쟁력은 한 정권의 정책지표일 뿐이다.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인간을 육성하는 교육을 하면 자연적으로 국제경쟁력도 생기고 국가경쟁력이 강화되는 것이다. 즉,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교육과정에서 나오는 하나의 산물을 마치 목표경향으로 잘못 인식해서는 안 될 것이다.

둘째, 국제경쟁력이 정책의 내용을 규정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내용이 국제경쟁력을 제고해 줄 것인지에 대한 임상실험이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예컨대, 교양영어의 필수과목화는 국제경쟁력의 제고라는 잣대에 의해 바로 정당화 된다. 꼭 교양영어를 들어야 교양이 는다거나 영어를 잘하게 되는지를 판단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오히려 영어를 스스로 학습하려는 학생들을 위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셋째, 국제경쟁력이라는 말은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기득권 세력을 대변하는 지배이데올로기로 기능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국제경쟁력의 제고를 위한 어떤 정책내용은 필연적으로 어느 계급계층의 희생을 강요할 것이고, 국제경쟁력의 제고라는 이름 아래에 그 정책은 정당성을 획득하게 될 것이다.

넷째, 전국의 대학을 국제경쟁력이 어느 정도 있는가에 따라 등급화하고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차등지급할 경우 경쟁력이 약한 지방사립대학들은 도산의 위기에 처할 것이다. 그리고 차등화에 따르는 국민적 위화감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작은 것을 얻으려고 큰 것을 잃는 우를 범하는 일이 될 것이다. 대학의 연구소도 규모의 문제로 전략할 위험성이 있다. 대학연구소의 경우 규모의 문제가 국제경쟁력의 문제로 등치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연구는 양의 문제가 아니라 질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거듭 주장하고 싶은 것은 우리 교육은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모든 국민이 자주적이고 창의적인 인격을 형성하게 하고, 우리 역사와 구체적 사회현실에 토대한 의식을 가지고 자유와 평등이 조화를 이루는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이상과 세계평화를 지향하는 민족, 민주, 통일교육의 실현"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예컨대, 인간 존엄성이 존중되는가? 자주적이고 창의적인 인격을 형성하게 하는가? 역사와 구체적 현실을 반영하는 내용인가? (너무 고도로 추상화시켜 학생들로 하여금 구체적 현실을 망각하게 하는 것은 아닌가?) 자유와 평등이 조화를 이루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하는가? 세계평화에 이바지하는가? 통일을 지향하는 교육인가? 민주시민을 육성하는 내용인가? 등이다. 그리고 이것들은 교육내용은 물론이러니와 교육정책수립, 정책집행, 정책평가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국제경쟁력의 제고'가 의미하는 바는 인간과 사회에 대한 관점이 적자생존, 약육강식의 논리에 입각해 있고 무한경쟁을 정책원리로 삼고 있다. 그것은 소수 정예주의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힘이 약한 다수는 희생을 강요받고, 민족내적 문제나 국내문제, 즉 사회, 경제, 노동, 농민, 정치문제 등은 은폐될 것이다. 결국 그것은 기득권세력을 정당화하는 지배이데올로기로 기능하게 된다.

따라서 대학교육의 개혁내용이 국제경쟁력의 제고라는 정책지표에 의해 수립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대학교육 개혁이 아니라 개혁이 될까 두렵다. ■